

일자리 대책 종합 평가와 2010년 일자리 정책 방향

허재준*

I. 2009년 일자리 대책 사업 추진배경

-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을 계기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제위기로 파급
 - '08년 4/4분기 중 성장률이 급락(전기 대비 $\Delta 5.1\%$)하고 '09년 1/4분기까지 경기가 급격히 위축
 - 자본유출, 외화조달여건 악화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취업자수도 증가율 둔화에 그치지 않고 '08년 12월에는 절대수 자체가 1.2만명(전년동월 대비 $\Delta 0.1\%$) 감소하고 '09년 3월에는 19.5만명(전년동월 대비 $\Delta 0.8\%$) 감소
-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2009년에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대규모 도산과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됨
 - 1998년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선진국 모두가 금융위기의 여파에 휩싸여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

<표 1> 주요경제지표 추이

	08.6월	08.9월	08.12월	09.3월
KOSPI지수(월평균, pt)	1,758	1,447	1,115	1,140
수출(전년동월비, %)	16.4	27.6	$\Delta 17.9$	$\Delta 22.5$
소비재판매(전년동월비, %)	$\Delta 0.7$	$\Delta 1.9$	$\Delta 4.5$	$\Delta 5.2$
취업자수(전년동월비, %)	0.6	0.5	$\Delta 0.1$	$\Delta 0.8$

자료: 증권거래소·한국은행·통계청.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장(hurjj@kli.re.kr).

- 이러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경제위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
- 정부는 '09.4월 28.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 유지·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집중 지원하는 등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보완적 역할을 강화
 - 위기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노사민정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일자리나누기 사업을 시행하였고, 희망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년인턴사업 및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확대 실시하고, 실직자 사회안전망을 보완
-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경제체질,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 정부대책 등에 힘입어 '09.2/4분기 이후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됨
 - 전기비 성장률이 1/4분기 중 플러스로 전환되고, 3/4분기에는 3.2%까지 성장하면서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함
 - ※ GDP 성장률(전기비, %): ('08.4/4) △5.1, ('09.1/4) 0.1, (2/4) 2.6, (3/4) 3.2

II. 2009년 일자리 대책

□ 2009년 일자리대책

◆ 전반적 평가

- 리먼 브러더스 파산보호신청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되고 실물경기가 현저하게 침체됨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함
 - 선제적인 위기관리 프로그램으로 시장에 강력한 부양 신호를 내 보내야 했음에도 2008년 11월 3일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에 근거하여 소극적으로 접근했으나,
 -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등 2009.3월 중에 공격적인 일자리대책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타 OECD국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성공요인으로는 ① 정부가 정책방향을 신속히 설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 ② 노사민정 합의로 고통분담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③ 고용보험제도 등 확충된 제도적 기반, ④ IT·석유화학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영

정상화 등

- 경기회복에 따라 실직과 빈곤에 대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대책을 축소하는 한편,
 -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근로장려세제 및 최저임금제도의 최적조합 모색 등 제도보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청년인턴

- 실업대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실무연수를 통한 취업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추진한 ‘청년인턴제도’는 단기적·임시적 일자리, 높은 시중손실과 같은 전통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에 청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력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인턴기업 인증제도는 구직자에게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여 대기업만을 지향하던 청년층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접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구인을 용이하게 함
 - 기업들이 원래 채용하고자 하는 규모 이상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함으로써 청년층들에게 직업경험 기회를 늘려 주었음
- 다만 기관마다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다르고,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인턴사업별 사업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필요함
 - 중소기업인턴의 인턴십 종료 후 관련분야로의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무지원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행정인턴은 취업준비생 또는 재학생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실무연수기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희망근로프로젝트

- 기존에 실시해 오던 ‘청년인턴사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외에 새로이 도입된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제한된 재원으로 저소득가구 소득보전 기능을 수행하였고 지방의 숙원 사업 중 사업비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기여함
 - 경기 악화로 인한 고용감소 완충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특히 6월 이후 임시직 고용지표 안정에 크게 기여함
 -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소득지원효과를 겨냥하여 도입한 유효기간 있는 상품권제도는 추가적 행정력을 필요로 하여 서비스 전달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지 않았고,

사용기한이나 가맹점 제한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으나

- 참여자나 가맹점의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소비 증진효과도 현금지급시보다 다소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희망근로 참여자 중 60세 미만 참여자의 비율은 52.1%(65세 이상 30.8%)로서 고령참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해당 사업 및 참여자 선정기준(소득, 재산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연령층 참가가 많았던 탓에 일부 사업에서는 산재우려로 인해 노동강도를 높일 수 없었고 희망근로수요를 증가시킨 측면이 있음
- 기존의 공공근로 일자리가 20% 가까이 감소했으나 노인일자리 참여자, 경과적 일자리, 실업자 직업훈련 등 기존 프로그램 참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음
- 참가자격 제한이 적어 노숙자들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노숙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됨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 사회서비스일자리는 2009년에 일자리대책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4.0만명 늘어난 월평균 14.4만명에 일자리를 공급함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조건설업 부문 등의 고용부진을 완화하는 완충장치(buffer) 및 저소득층, 노인·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적합한 일자리 공급원으로도 기능해 왔음

○ 정책범주(Scope) 설정, 총괄·조정, 성과분석,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의 전반적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경제위기를 맞아 지원하는 일자리 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 관리안 마련, 중복 조정, 전달체계의 독점성 극복, 경과적 일자리로서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일자리나누기

○ 고용유지지원금과 노사민정 합의에 힘입은 양보교섭(concessional bargaining)을 근간으로 하여 과감하게 시행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상반기에 적어도 9.5만명(월평균) 이상의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사중효과 등을 제외한 순효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적어도 2.4만명의 실업자 감소와 7.1만명의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 ※ 임금조정에 의한 고용유지 효과 5.8만명, 지원금에 의한 고용유지효과 약 3.2만명, 공공기관에서 절감한 노동비용으로 새롭게 창출한 고용 0.5만명 이상
- 한시적 조치들은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의거해 지원금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009 정부의 일자리대책 사업 요약〉

-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2009년 연평균 수혜자수는 51.9만명, 일자리나누기 수혜자수는 9.1만명
 -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08년 대비 28.4만명이 추가적으로 고용기회를 얻고 고용유지 혜택을 입은 수혜자도 8.0만명 증가함

〈일자리 대책 월평균 수혜자수〉

(단위: 명)

	2008(A)	2009(B)	증감(B-A)
○ 직접일자리 창출	234,987	519,324	284,337
청년인턴 소계	2,946	54,312	51,366
사회서비스 소계	104,841	143,831	38,990
단기일자리 소계	127,200	321,181	193,981
○ 고용유지	10,511	90,724	80,213
전 체	245,498	610,048	364,550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 사회적기업〉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임시일 자리를 제공하던 공공근로사업이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화한 형태
 - 공공근로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안정적인 일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03년 노동부 주관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시행
 - '07년부터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부를 총괄부처로 하여 관련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 국가재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 관련 서비스를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의해 제공하는 일자리의 총칭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규모〉

		'08년	'09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부처	10개	8개
	예산(억원)	10,458	15,644
	일자리규모(만명)	10.4	14.4

주: 일자리 규모는 월평균 개념.

III. 노동시장 현황 및 전망

1. 노동시장 현황

□ 전반적 상황

- 외환위기 당시에는 상용직 근로자수가 급감했던 반면 '08년 하반기 이후에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
 - 상용직이 전년 동기 대비 32만명 내외의 증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청년층, 여성, 임시일용직의 감소가 두드러짐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근로자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5~99인 사업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10만명을 하회
- 실업급여 신규신청자수는 1월에 12.8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였고 10월에는 2008년 수준으로 복귀

- '09년 10월의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6.7만명으로 '08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조정도 일단락됨

□ 청년층

- 2003 ~ '08년간 실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애로층의 비중은 8.6%('03)에서 10.4%('08)로 증가했고
 - 특히 4년대졸 이상의 취업애로층이 13.7%에서 18.8%로 크게 증가
 - ※ 취업애로층 = 실업자 + 취업준비 비경황 + 유휴 비경황
- 위기가 본격화된 '08년 하반기 이후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증가하는 반면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형태로 취업애로층이 증가
 - 경제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장기간의 취업준비 활동을 포기하고 있지만, 일자리 감소에 따라 취업 애로를 겪는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 '08 ~ '09년에 이어 '10년에도 '청년층'의 구직기회가 제약됨으로써 구직기간은 '98년 외환위기시보다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 ※ 금번 위기 대응과정에서는 도산보다는 휴업을 하는 기업이 많아, 도산기업이 많았던 외환위기에 비해 신규채용 기회는 줄어들 전망

□ 비정규직

- 임시일용직으로 파악한 비정규직은 상반기에 9.6만명 감소
 - 6월 이후에는 정부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 영향으로 임시직이 증가
- '비정규직'은 고용조정의 일차적 대상이면서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상당수가 경제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음
 - ※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36.2%, 건강보험 41.5%, 국민연금 40.0%

□ 자영업자

- 지속적 자영업 경영환경 악화에 더하여 금번 위기로 '영세자영업'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음
 - 상반기에만 24.1만명의 자영업주가 감소했고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음
- ※ 영세 자영업 경영환경 악화 요인: 대형할인매점의 증가, 매출 투명화, 선거비용 감소, 소비자 선호 고급화 등

□ 여 성

- '09년 상반기에 감소한 취업자수가 14.0만명임에 반해서 여성취업자는 14.2만명 감소 (101.4%)
 - 여성 자영자는 연령계층으로는 30대, 업종으로는 소규모 개인서비스업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표 2> 범주별 취업자수 증분

(단위 : 천명)

	2007	2008	2009
	연평균	연평균	상반기
청년층	-68	-118	-155
여성	120	48	-141
자영업주	-86	-79	-241
임시·일용직	2	-75	-96
상용직	416	387	316
전체 취업자수	282	144	-140

□ 빈곤과 사회안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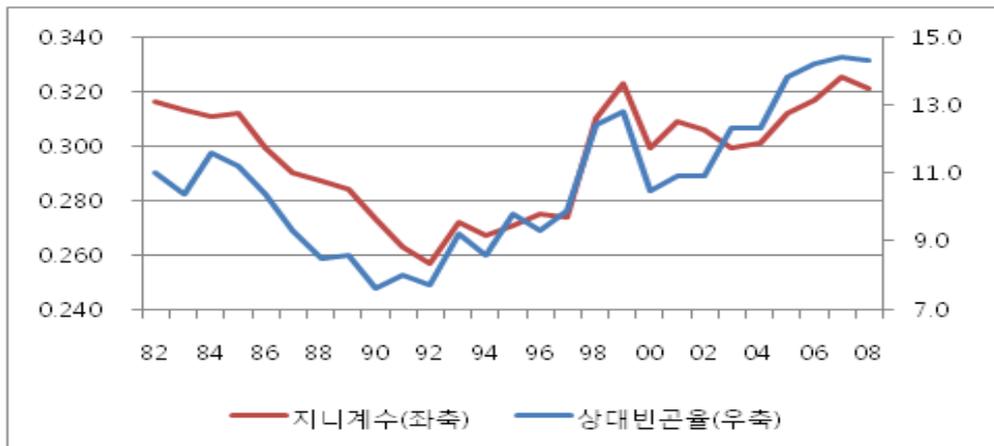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1992년부터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8년에는 전년 대비 0.3%p 증가한 15.1%에 이르고 있음
 - 2000년 이후 상대빈곤율의 증가 속도가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의 증가보다 빠름
 -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은 '02년 이후 9%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실업과 빈곤 위험이 높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호 수준이 미흡함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 근로장려세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실시

되었으나 사각지대가 넓고 효과가 제한적

- 공적이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에 집중되어 있고 고용보험 가입은 소득 중 상위 가구에 편중

※ 5분위에 이르기까지 50%가 넘는 가구가 기초생활보장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은 소득 하위 1분위가 58%, 2분위는 8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전인구의 3.3%.

[그림 1] 지니계수 및 상대빈곤율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 경제 및 고용 전망

- 세계경제는 2010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다가, 2011년 이후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경제는 대내외 여건 개선 등으로 2010년에 연간 5.5%의 성장률을 실현할 전망이다
- 고용사정은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되면서 취업자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증가폭은 연간 2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상반기까지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어 고용증가는 단위 성장률당 4만명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 ※ 2000년대에 단위 성장률당 취업자수 증가는 평균 6.9만명 수준

<표 3>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MF	5.2	3.0	△1.1	3.1	4.2	4.4	4.6
OECD	4.6	2.2	△1.7	3.4	3.7	-	-
한국	5.1	2.2	0.2	5.5	-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년 10월.

OECD, *Economic Outlook*, 2009년 11월.

KDI, 「KDI 경제전망」, 2009년 11월.

- 정부는 2010년에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과 함께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산업선진화, 투자확대여건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여력을 복구하는 한편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음
 -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경기 고용상황 등을 보아가며 거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 한시적으로 도입된 위기대응조치들은 환원시키되 그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이행대책을 마련해야 함

IV. 2010년 일자리정책의 방향

□ 기본방향

-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내지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의 1차적 원인은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진보에 따른 경영환경의 급변과 전지구적 생산기지 이동과 같은 세계적 경향임
 - 그러나 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제·산업구조, 교육·복지정책, 전문직 업력규제, 진입규제, 노동시장 규제 등에도 원인이 있음
- 기존의 경제·산업·교육·복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점검하여 관련 제도·규제·정책을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개선 처방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예산운영에서 고용인지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개념 아래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도모하되,

- 그 과정에서 단기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장기적 경제 효율성을 훼손하는 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IT·BT·NT에 기반한 신성장산업과 에너지절약 친환경적 녹색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2010년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경제상황에 맞추어 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추진규모를 조율해야 함

-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생계불안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청년실업 내지 청년유휴인력규모는 2010년에도 높게 유지될 전망이므로 청년인턴 사업은 2009년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은 수준에서 청년층에 직업경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주도의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지원하고 실업급여·가계안정자금대부·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산이 없는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의 비전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제체질 변화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함

- 2010년에는 성장률이 5.5%에 이르더라도 고용증가는 20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1년에는 5% 이상의 성장으로 일자리가 연간 30만개 이상 늘어나도록 경제 체질을 바꾸어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가 현저하게 늘어난다는 비전과 함께,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위기가구 지원을 늘려 구조조정과정의 실직자에 대한 국가 사회안전망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제시로 비정규직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장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가구 지원 제도로 신청자에게 우선지원 후 추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최장 6개월간 가구단위로 현물지원함

○ 심층상담, 경과적 일자리, 노동시장 수요,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훈련을 결합한 취업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등 고용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전문가 활용 풀을 확대하고 직업상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실업자, 청년인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대졸 실업자에 대해서는 IT 및 인터넷 분야, 녹색산업분야, 디자인 분야의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영업자 대책은 경쟁력을 가진 자영업이 번창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쟁력을 가진 자영업이 적정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장인인증제도, 체인화를 통한 품질향상, 공동 R&D를 통한 명품개발, 홈페이지 공동관리 등을 보조하는 것이 효과적임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가입효과와 보호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음. 임의가입제도에서는 실업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만이 가입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현상이 심하여 자영업 고용보험 재정 적자가 일반적 현상이 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기간을 연장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부정수급 문제도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고 하면 보호대상이 극히 제약되어 실효성이 적어지기 때문

□ 일자리 대책 정비 방향

◆ 청년인턴

- 중소기업인턴의 인턴십 종료 후 관련분야로의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무지원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보조금 제도와의 중복성을 해소, 요건 등에서 여타 청년층 취업지원대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하되,
 - ※ 중소기업인턴제도는 현재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훈련과 현장체험을 결합한 견습제도로 운영을 지속할 필요
- 행정인턴은 취업준비생 또는 재학생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실무연수기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의 인턴제도〉

- 미국의 인턴제는 주요 기업체와 관공서에서 대부분 도입·활성화
 - (대상자) 고졸, 대졸자 이상(재학생 포함)의 자국민은 물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 학생도 포함
 - (민간기업) 인턴제도를 신규직원 채용방법으로 이용하고 학력과 직무에 따라 차이를 두고 보수 지급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부문과는 달리 백악관이나 행정기관 등은 대부분 무급이며 교통비 정도를 지급함

- 행정인턴 사용이 민간 NGO나 사회복지 시설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봉사 및 체험을 통한 사회경험이라는 점에서 수당은 최소화하고 기간은 6개월 단위(대학의 학기와 병행)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 일자리대책 차원과는 별도로 장기적 발전의 견지에서 정책범주(Scope) 설정, 총괄 조정, 성과분석,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의 전반적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규예산사업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을 막론하고 정부의 재정이 인건비에 투입 되면서도 민간주체가 주도하는 사회서비스 전체에 대한 관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와 함께 사례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중복성 여부를 진단하고 조정해야 함
 - 기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추진 방식 중 기존 부처 전달체계를 확장하는 방식은 독점성과 경직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전달체계에서 다양한 민간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바우처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09년에 증가한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으나 희망근로를 줄이는 대신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기조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및 정착을 위한 경과적 일자리로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희망근로프로젝트

- 일자리 제공의 차원보다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수준의 사업제안들을 접수하고 수범사례들을 골라 축소된 규모에서 지속 하되 절약한 재원의 일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하여 위기가구들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무소득자를 관리하여 향후 긴급소득지원제도 시행 필요시 소득지원대상을 판별하는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중 일부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하여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링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일부 지속관리가 필요한 청장년층 참여자를 취업지원패키지 사업과 연계하는 등 희망근로 마무리 단계에서의 참여자 관리 방안을 마련함

◆ 일자리나누기 사업

- 한시적 조치들은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의거해 지원금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경제상황이 예상외로 나빠질 경우 단순 휴직휴업 등의 경우가 아닌 교대제 전환, 학습훈련을 통한 고용유지의 경우에 한해 연장지원을 고려

-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수준을 1/2~3/4 사이에서 노동부장관 고시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고용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근로빈곤의 예방완화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 실직으로 인해 곧장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고 실업상태에서 취업과 보다 나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이 용이하도록 보조
- 피보험자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무했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음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함
 - 사용자에 대해서는 미납보험료와 징벌성 금액을 징수하고, 피보험자로부터는 미납보험료를 징수하는 사후 청구제도와 함께 실시
- 사회보험 누락자가 대량 포진되어 있는 근로자 집단을 식별해서 그들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사회보험료 감면은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효과를 갖고 위기시에 목표집단을 식별하는 데에도 기여함
 - 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줄임으로써 위기시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임시적 사업을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지님
 - ※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100% 감면시 연간 8천억원, 50% 감면시 4천억원 소요됨을 고려할 때 2009년과 같은 규모의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는 비용은 2~6

년간 사회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재원규모에 해당함

- 생계비대부사업 결합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실업자 및 비정규근로자가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중 생계비를 대부하는 사업¹⁾을 원용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 기회 우선 부여
- 심층상담, 경과적 일자리, 노동시장 수요,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훈련을 결합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야 함
 - 직업상담원 자질 향상과 함께 고학력 여성인력 등 민간인 프리랜서 내지 파트타임 전문가 활용을 정착시키고,
 - 실업자, 청년인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등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11]**

1) 동 사업은 2009년부터 722억원 예산으로 2만명 대상으로 실시 중임.